

“의료 공백 종합대책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박 의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 보장할 수 없어… 지역 의사 사제 도입 등 법적 장치 병행”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 마련, △의료 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

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하고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은 “시장기반의 현 의료 공급체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



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지역의 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 의과대학 확대 설립 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 내 의대 졸업생의 29%만이 지역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하여 수련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의 의료인력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과 전공의 인원도 함께 확대

하고, 지역 내 수련 인프라 구축과 공공병원의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료개혁의 장기화에 따라 의사 인력의 단계별 수급에 차질이 생겨, 향후 5년 이상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초국적 의학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적 흐름에서 해외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이 의료인력 공백을 대비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일정기간 추가 수련을 통해 국내 시스템에 적응시켜 의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대해 고려해 볼 것을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홍오)가 지난 19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유신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최홍오 의장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다”면서 “일교차가 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영자 의원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 개선을 촉구했다.

이중선 의원은 집중호우 대비 만경강 수로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고, 장경호 의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소길영 의원은 금마고도지구 한옥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해 발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에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지난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 만들자고 했다.

안건 심의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채택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협약)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서항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한 뒤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연 가운데,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대해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연 가운데,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대해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태권도,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유”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발의한 ‘국가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해 현재까지 4,000여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겨뤄지게 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

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건의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향이 있다”며,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설립계획 확정

총 199억8500만원 투입… 김솔지 도의원, 도교육청에 제안

지역 학생 자치·예술·진로체험공간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부안지역 학생들의 자치, 예술, 진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됐다.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시분 공채산관리계획안에 담긴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원안 통과됐다. 해당 계획은 연면적 4,123.6㎡, 지상 3층 규모로 총 199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 6월까지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소년 전용 교육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솔지 의원이 부안지역 학

생 자치, 예술, 진로 체험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에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안군에 대응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솔지 의원은 “부안 지역 학생들을 위해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설립에 함께 해주신 전북자치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 등 관계공무원

과 지역정착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완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선거일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선거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4월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인 증상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 현실에 맞게”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체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아이라니하게도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 대부분이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현재까지도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익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 대부분이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현재까지도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익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명확한 집행기준을 가지고 버스업체의 정상화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즉각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서둘러 수립하여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도가 비수익노선의 손실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전액 보조가 아니다 보니 도내 시외버스업체 사정

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 손실금액이 총 68억원 정도였는데, 2022년 기준 손실금액은 무려 230억에 달했다. 불과 몇 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 대부분이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현재까지도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익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명확한 집행기준을 가지고 버스업체의 정상화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즉각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서둘러 수립하여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적극 추진을”

강동화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 19일 진행된 제40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2001년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에 설치된 지하철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추락·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오이도역 사망 사건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지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시행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법정 대수는 275대인 반면, 전북자치도의 도입 대수는 233대로 42대가 부족한 상황이고, 저상버스 역시 목표 도입 대수는 430대인 반면 실제 도입 대수는 256대로 174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재훈 기자



정이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적 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동화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여건이 취약한 비도시 지역의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 내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동화 의원은 장애인의 연속 보행을 통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3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현안업무보고 실시 및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지난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유동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군산=이재훈 기자